

김중겸 신임 한전 사장 공식 취임



한국전력공사(KEPCO)는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제18대 김중겸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중겸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글로벌 미래경영,

인간중심 경영, 신뢰소통 경영, 변화혁신 경영, 가치창조 경영, 사회책임 경영 등 6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정전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틀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정부·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맡은 전력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국가 전력 운영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며, “관련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수립하는 동시에 우리 조직 구성원의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사장은 정전사태의 조기수습 및 재발방지 일환으로 ‘전력수급 비상대응 시스템 개선 TF’ 구성을 지시했다. 한전은 동계 전력수급 대책반과 비상대응체계 개선반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수요 예측프로그램 대수술

- 국무총리실, 정전사태 재발방지대책 발표
- 지경부, TF발족... 세부방안 수립 착수

전력수요 예측프로그램이 대폭 손질된다.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긴급매뉴얼을 새로 마련, 현행 4단계로 구분한 위기경보시스템과 별개로 운용된다.

전기요금체계는 원가주의에 입각해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정전사태 재발 방지대책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끝이어,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7일 '전력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출범, 구체적인 대응책 수립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발표에서 정전사태가 ▲전력당국의 수요예측 및 공급능력 오판 ▲기관간 상황정보 미공유 ▲대국민 홍보지연으로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관련 대책도 이 같은 3가지 뼈대를 중심으로 세웠다고 국무총리실은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지식경제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등과 세부실행방안을 조속히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정전사태가 일어 난지 이틀째인 지난달 17일 지경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전력거래소, 한전 전문가들과 정부합동점검반(반장 총리실 국무차장)을 구성해 현장조사와 정전대책 수립을 진행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정전사태를 계기로 가스·상수도·통신 등 여타 국가기간망에 대한 위기관리대응체계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9·15 정전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27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임태희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난 '2013년까지 지속될 듯'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5일 최대수요(6,721만 kW)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치를 갈아치웠던 지난 8월 31일(7,219만kW·예비율 7.5%)에 크게 밀돌았다.

여름·겨울 피크철 하루 최대전력 사용량의 가늠자인 7,000만kW도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수요가 아님에도 제한송전이 실시된 것은 하계수급 기간이 끝나 830만kW 이상이 계획예방정비에 돌입한 탓이다. 발전사들이 여름 피크에 대비해 미뤄뒀던 발전기 점검 작업을 최근 시작한 것이다.

9월 늦더위와 발전기 점검이 겹쳐 갑작스럽게 제한송전이 이뤄졌지만 전력난은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반기에 한번씩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도 이제 상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 여름 전력 공급 예비력을 최대전력 수요 대비 5.6%(전력예비율)인 420만kW로 전망했다. 이는 비상 상황인 400만kW에 근접하는 것으로 발전소 1~2곳만 멈춰도 정전이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의 공급 능력으로는 올 겨울에도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몇 년째 이상한

파로 겨울철 전력 수요가 여름을 역전했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력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더라도 오는 2013년까지는 전력예비율이 7~8%대에 그치는 전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4년까지 신고리원전 3·4호기 등 발전소 21기 준공을 통해 1,145만kW의 공급 능력이 추가로 확충되면 14% 이상 수준의 예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풍력·수력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은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고 원자력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사고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전력난은 공급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수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연도별 전력수요 역시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불필요한 전기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전기요금을 4.9% 인상했지만 현실화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말부터 전국서 전기차 충전 가능

연말부터 전국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이 가능해진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에 따라 충전시설을 광역시도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38개 지자체를 포함해 공공기관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급속 및 완속 충전기 204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전인프라 설치장소 현장조사 ▲설계 ▲설치공사 ▲충전기 구매·설치 및 감리 등의 제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공공기관 충전인프라를 구축한 다음 오는 201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완속 및 급속 충전기 표준화와 성능평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KEA

